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19
----------	------

2021년 6월 15일  
운 영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6. 9. 홍성룡 의원 외 109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1. 6. 9.

다. 상정 일자 : 제30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21년 6월 1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영토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음.
- 우리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정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대사를 공개 초치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음.
- 특히, IOC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포츠와 정치적 사안을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반도기에서 독도 표시 삭제를 권고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사례에 비춰 명백하게 편파적인 태도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 최근 국회가 규탄 결의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일본 정부의 그릇된 태도에 대한 규탄과 올림픽 보이콧을 포함한 일본정부와 IOC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촉구하고, IOC와 국제사회에 우리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천명하고자 함.

### **3.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제올림픽위원회, 주대한민국일본대사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1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결의안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영토주권 수호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2 결의안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2019년 7월 대한민국 외교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사이트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삭제를 요구하였음.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공식사이트의 성화 봉송 경로 지도에 표시된 독도><sup>1)</sup>

1) 연합뉴스, 2019. 8. 23

- 이후 대한체육회가 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에 수차례 홈페이지 수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6월 1일 외교부가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尚)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공개 초치하는 등 엄중한 외교적 대응에도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음<sup>2)</sup>.
- 일본의 이런 태도에 대해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지난 5월 2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쿄올림픽 조직위 독도 일본 땅 표기 강행 시 올림픽 불참 선언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되었음.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뢰로 지난 6월 5~6일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7.6%가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찬성한다’<sup>3)</sup>는 의견을 보이는 등 국내 여론은 날로 악화되고 있음.
- 특히,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중재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IOC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SNS를 통해 “평창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 독도 삭제를 권고했던 IOC가 2021년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IOC에 대한 국제적 비판 여론을 모으는 캠페인 진행을 밝히기도 했음.
- 최근 국회가 일본정부를 비판하는 2건의 결의안을 접수한 것을 비롯해, 전라남도의회가 지난 6월 1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각 지방의회가 일본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2) 한국정부의 시정요구에 대해 홈페이지 디자인을 수정했으나 화면을 확대할 경우 여전히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3) ‘반대한다’ 는 응답은 21.9%(매우반대한다 11.8%, 대체로 반대한다 10.2%)로 조사됨.

- 본 결의안은 올림픽이라는 평화적이고 정치중립적인 스포츠 대회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토 침탈 의욕을 드러낸 일본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부적절한 태도를 비판하고, 우리 정부의 합당한 중재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일본을 편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IOC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의 국내 여론에 비추어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3 종합 의견

- 가장 평화롭고 정치 중립적이어야 하는 올림픽을 독도 침탈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일본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부적절한 태도를 비판하는 국내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가 정부 관계 부처와 IOC 등에 이와 같은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결의안의 취지와 시기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반복적인 도발행위가 독도를 국제적으로 정치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에도 귀를 기울여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냉정한 대처도 요구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0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홍성룡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19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6월 09일

발 의 자 : 홍성룡,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유형찬, 유 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 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의원(110  
명)

## 1.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정부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조치가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국제법상 도발 행위라고 판단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를 요구해 우리 주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함.

## 2. 제안이유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영토 지도에 독도를 표기해  
(<https://olympics.com/tokyo-2020/en/torch/route/>)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음.
- 우리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정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공개 초치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음.
- 특히, IOC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포츠와 정치적 사안을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반도기에서 독도 표시 삭제를 권고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사례에 비춰 명백하게 편파적인 태도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 최근 국회가 규탄 결의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일본 정부의 그릇된 태도에 대한 규탄과 올림픽 보이콧을 포함한 일본정부와 IOC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촉구하고, IOC와 국제사회에 우리 영토주권 수호의지를 천명하고자 함.



### 3.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제올림픽위원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도발행위임을 경고한다. 또한, 스포츠에 정치적 문제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이같은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는 국제적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며, 수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버티는 안하무인의 태도 또한 평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일본은 과거 침략 전쟁기간 동안 이웃 국가들에게 자행한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기는커녕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사를 왜곡하고 감추기에 급급한 망언과 망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도 그릇된 역사관에서 비롯된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이를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힌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한반도기의 독도 표시를 삭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IOC는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IOC가 일본정부의 꼭두각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하자는 올림픽 정신과 목적을 송두리째 훼손하고 있다. 또한, 차별과 분쟁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해 세계인의 축제의 장을 망치고 있으며, 이를 조정해야 할 IOC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침탈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며, 그 어떠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결연히 맞설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반복적인 도발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스포츠와 정치를 분리해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서울특별시의회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함께 엄중히 경고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2021.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

## **Resolution Condemning Japan's Encroachment on the Korean Territory of Dokdo**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warns that the Tokyo Olympic Organizing Committee's marking of Dokdo as Japanese territory on its official website is a provocative act that directly infringed o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We also reiterate that such action runs counter to the Olympic spirit, which strictly forbids political interference in sports, and we strongly condemn it.

Since Dokdo is clearly an integral part of the Korean territory historically, geographically, and under international law, the Japanese government's behavior of encroaching on the Korean territory of Dokdo deserves international condemnation. It is clear that its arrogant attitude of refusing to rectify the wrong despite repeated complaints by the Korean government will als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peaceful and future-oriente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Far from sincerely reflecting on the inhumane and depraved acts it committed to neighboring countries during the past wars of aggression, Japan has made reckless remarks and actions to distort and hide its history at every opportunity. The Tokyo Olympic Organizing Committee's encroachment on territorial rights to Dokdo is also an unforgivable act stemming from a wrong view of history, and all Koreans cannot condone this.

When it received protests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t the time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recommended that Dokdo be removed from the flag of the Korean Peninsula, saying, “It is inappropriate to link political issues with sports.” However, the IOC remains silent about Japan’s claim to Dokdo, which is contrary to the Olympic spirit and has brought criticism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are forced to ask the question of whether the IOC is a puppet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Tokyo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are completely undermining the Olympic spirit and purpose of contributing to world peace through sports. Furthermore, they are ruining the festival of people around the world by providing the causes of discrimination and conflict themselves, and the IOC, which has a role to coordinate this, is conniving.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requests an immediate apology and correction for the repeated Japanese invas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nd resolves as follows, declaring that it will stand firm against any provocations.

1.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stop encroaching on Korea's territorial sovereignty by marking Dokdo as Japanese territory on the Tokyo Olympic and Paralympic map, and apologize for the repeated provocation.

1.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demands immediate correction of the measures taken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Tokyo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that undermine the Olympic spirit of contributing to international peace by separating sports from politics.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take all immediate and decisive measures against Japan's invasion of sovereignty over Dokdo.

1.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together with all Koreans, sternly warns against Japan's provocative actions against Dokdo and urges prevention of recurrence.

**2021. . .**

**Members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